환자 이송중 사고 낸 구급대원 처벌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 보호자 치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시민위원회 의견 그대로 수용… 경찰 판단 뒤집혀

지난해말 제주지역에서 60대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우여곡절 끝에 형사 처벌을 피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35·소방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운전하는 구급차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6시28분쯤 의식을 잃은 B(당시 61세)씨를 싣고 병원으로 가다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인근 CC(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A씨는 B씨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지만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자 급하게 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 보호자와 구급대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쳤으며, 이 중 B씨는 사고 이틀 뒤인 그달 14일 병원에서 숨졌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 위반을 해도 처벌 받지 않지만 A씨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서 이야기가 달랐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

경찰은 고심 끝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선 '교통 사고가 B씨의 사망원인이 아니다'는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무혐의를, B씨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사건이 내부 지침으로 정한 긴급자동차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응급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상대 차량을 발견했을 때 급히 제동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환자 보호자가 크게 다쳐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부 지침은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자동차 정당행위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해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에서 처리 방향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다.

검찰이 택한 방법은 검찰시민위원회였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시민위는 만장일치로 환자 사망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보호자 치상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도 이런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공익 목적의 구급활동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긴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화재특별조사로 적발 건수 느는데 인력부족에 불법건축물 처리 '헉헉'

제주시 6년간 3800건 확인
이중 1500건은 조사도 못해
"인력요청에도 증원 어려워"

제주시 곳곳에서 위반(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인력 부족으로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000건이 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행정처분을 총 5명의 인원이 담당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정원 증원이 쉽지 않아 불법 건축물이 만연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시가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확인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총 3794건에 이른다. 주택 등 일반건축물이 1449건이고, 밀양·제천 대형화재로 2018~2019년 제주소방서가 숙박·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60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이 확인된 2345건을 제주시로 기관 이첩했다.

불법 건축물 유형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용도실·창고 등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공터에 컨테이너 설치 등 허가(신고)없이 무단으로 신·증축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해체하는 무단 대수선도 불법이다.

시는 불법 건축물 3794건 중 838건은 철거 등 종결 처리했고, 1430건은 1~3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진행중이다. 철거 전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0건에 부과됐다. 하지만 나머지 1526건의 불법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문서로 위반 내용만 통보하고 현장조사는 못한 상태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2015년 228건, 2016년 342건, 2017년 224건이었던 것이 화재안전특별조사로 2018년 848건, 2019년 1993건으로 폭증한 탓이다. 하지만 건축지도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5명 뿐으로, 2명씩 조를 이뤄 진행하는 현장방문은 일주일에 15~20건에 머물고 있다.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3차례의 시정명령 후 이뤄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6단계의 절차를 밟는데 최소 3~4개월이 걸리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늦어지면 증·개축 등 사회에 불법이 만연해질 우려가 높아진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회도 제주시에 불법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조속한 부과와 체납자에게는 체납조치 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업무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인력 충원이나 별도기구 설치 검토를 권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충원 없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 원활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어려워 인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정원 증원이 쉽지 않은 게 또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코로나19 종식되길…" 관광업계 방역 안간힘

제주시, 사업체 현장지도서 대부분 예방지침 준수 확인
우려 속 관광 회복세 기대도

코로나19 검사 '워킹스루'로 간편히 제주시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워킹스루를 운영하는 가운데 3일 보건소 채취실에서 의료진들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하루빨리 감염병이 종식되길 기대하며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전국 곳곳에서 다수가 찾는 관광지 특성상 행여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달 27~28일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관광사업체 방역체계 유지와 이행지침 홍보를 위해 126곳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지도는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야영장업, 유원시설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이행지침 배부와 안내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시설방역 등 방역체계 유지 여부를 중점 실시했다. 대부분의 관광사업체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주기적 방역과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4·5성급 관광호텔은 투숙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문진표 작성, 열화상 감지 카메라로 발열체크를 하고, 일부 가족호텔은 프런트 바닥에 2m 거리선을 표시한 곳도 있었다. 일부 야영장은 텐트를 한 칸씩 건너뛰고 이용객을 받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유원시설업은 마스크 미착용 고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료 제공하거나 또 탑승인원을 정원의 약 60%만 탑승토록 조치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다수 관광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방문객 안전을 위해 생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편"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종식돼 제주관광시장이 회복되길 바라는 한편에선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방문객이 기피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잖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조직원 폭행 일당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4명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도내 모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인 A씨 등 4명은 2016년 1월 후배 조직원 B(21)씨 등 3명을 서귀포시 한 오름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후배 조직원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가해자들 모두 각자 다른 범죄전력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잡초의 경감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au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낭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탱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